

# 코로나19가 일본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부의 대응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④ - 일본

박준희 (일본 사이타마대학 인문사회연구과 박사과정)

## ■ 머리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본 경제 및 노동시장이 심각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가 하락하고 있으며, 2분기 경제성장 전망이 매우 어둡다. 노동시장도 심각한 악영향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해고나 고용 중지가 5월 21일 시점 1만 835명으로, 2월에 비해 25배나 증가했으며, 4월 휴직자는 약 600만 명을 기록해 일본의 노동인구 6,800만 명 중 9%가 휴직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기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각종 급부금을 지급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비효율적 행정시스템으로 인해 대응속도가 심각하게 느리며, 지원금이 위기에 처한 경제주체에게 빠르게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의 일본의 코로나19에 대한 현황과 코로나19가 일본의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 ■ 일본의 코로나19 확산 현황

일본에서는 2020년 5월 20일 기준으로 16,29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총 425,436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수치만 보면 감소추세에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수치를 가지고 일본의 상황이 어떤 국면에 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언론이 지적하듯, 일본의 검사 수치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검사를 잘 시행하지 않기 때문이다.<sup>1)</sup> 5월에도 의료현장에서는 보건소가 검사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으며,<sup>2)</sup> 때문에 도쿄의 양성률은 31.7%<sup>3)</sup>까지 높아지기도 했다.

수치와 관련한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두 번째 이유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일본 정부의 행정력의 문제가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보도를 보면, 도쿄에서 코로나 관련 감염자 현황 보고를 받는 수단이 팩스 1대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에 따른 확진자 수 누락 또는 중복 집계가 발생한 것이 5월 11일(111명 누락)과 5월 21일(40명 누락) 두 차례 보도되었다. 이러한 문제제기로 인해 5월 12일부터는 온라인 집계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21일에도 누락이 발생했으며, 일본의 행정 시스템 자체가 아날로그적<sup>4)</sup>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얼마나 빠르게 극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보도가 있기 이전에는 얼마나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이 현재 정확히 어떤 상태를 거치고 있는지는 알기가 어렵고, 코로나19의 영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예측도 하기 어렵다.

- 1) 週刊朝日(2020.4.14), 「患者に隠されるPCR検査「3条件」とは? 現役医師が告白「コロナ野放し」の実態」, <https://news.goo.ne.jp/article/dot/nation/dot-2020041200016.html>, 朝日新聞(2020.4.16)「(新型コロナウイルス)日本、PCR検査少ないのは」,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4443255.html>
- 2) 時事通信社(2020.05.04), 「PCR検査、大阪で最長10日待ち 医師「保健所受け付けず」一民間委託で拡充急ぐ」, <https://www.jiji.com/jc/article?k=2020050300126&g=soc>, 毎日新聞(2020.5.6)「地域に発熱外来、PCR検査体制を」コロナ対応に苦慮する診療所から提言「<https://mainichi.jp/articles/20200505/k00/00m/040/239000c>
- 3) NHK 코로나19 통계 특설사이트(최종 접속일: 2020.5.25), <https://www3.nhk.or.jp/news/special/coronavirus/tokyo-positive/>
- 4) 日本経済新聞(2020.05.05), 「アナログ行政、遠のく出口 ITと民間活用カギに」,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8781700U0A500C2MM8000/>

## ■ 일본의 노동시장 현황

코로나19로 인해 일본의 노동시장 현황은 좋지 않으며, 도산이 늘어남에 따라 그 전망도 밝아 보이지 않는다.

### 고용상황

현재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악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코로나19와 관련해 해고 상황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의 기자회견에서 그 수치를 알 수 있으며 전체적인 노동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4월 노동력조사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다.

카토 카츠노부 후생노동상은 5월 22일의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해고된 노동자가 5월 21일 시점으로 1만 835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은 2월부터 해고나 고용 중지와 관련하여(예상치 포함) 도도부현 노동국의 보고를 집계하고 있다. 집계 결과를 살펴보면 2월 282명, 3월 835명, 4월 2,654명, 5월 7,064명(5월 21일 기준)으로 고용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up>5)</sup> 긴급사태가 선언된 4월 이후 해고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up>6)</sup> 즉 2월에 비해서 코로나19 관련 해고나 고용중지는 25배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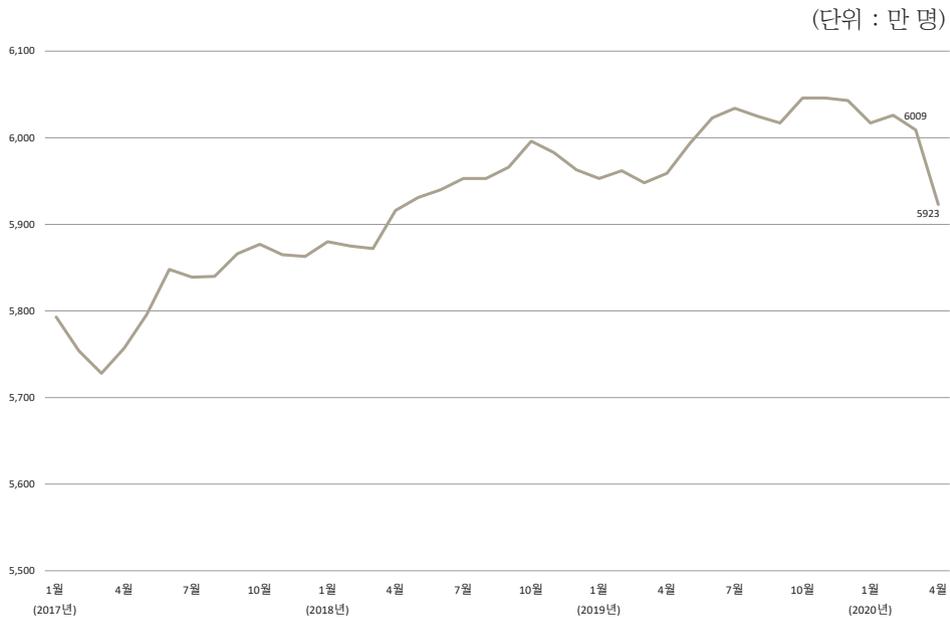
전반적인 고용상황은 5월 29일에 발표한 총무성의 「노동력조사」 4월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 통계에 따르면 취업자<sup>7)</sup> 수는 6,628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0만 명이 감소했으며 이는 88개월 만의 감소세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3,698만 명으로 27만 명이 감소했으며 여성은 2,930만 명으로 53만 명이 감소했다. 고용자 수는 5,923만 명으로, 전년동월

5) 毎日新聞(2020.5.23), 「コロナ解雇1万人超 雇用情勢、急速に悪化」, [https://mainichi.jp/articles/20200523/ddm/012/040/075000c?\\_ga=2.62349164.1734264231.1590165055-253790024.1590165051](https://mainichi.jp/articles/20200523/ddm/012/040/075000c?_ga=2.62349164.1734264231.1590165055-253790024.1590165051)

6) 한편 후생노동성은 해당 집계에서, 현재까지는 정사원과 비정규 노동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해고가 발생하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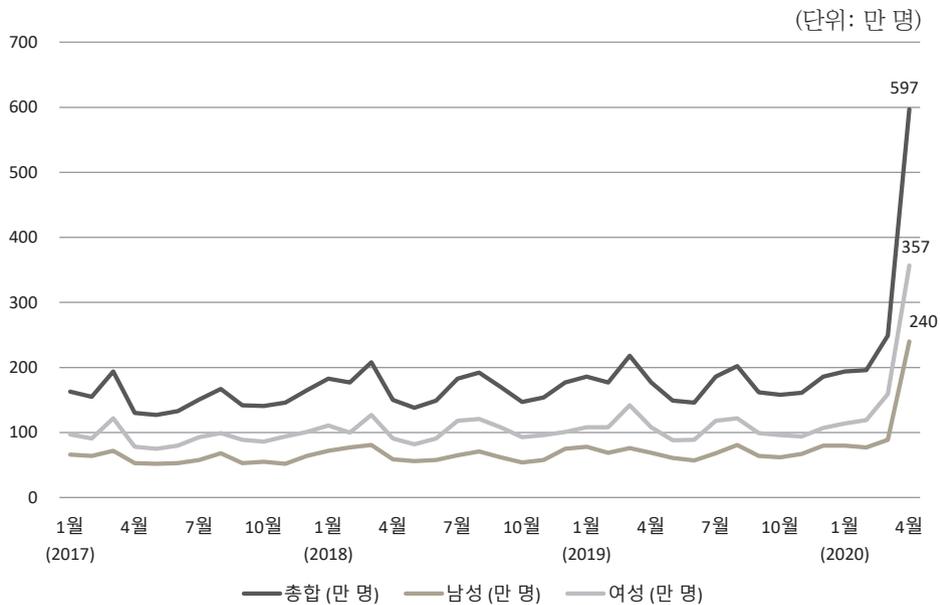
7) 「노동력조사」에서 취업자는 자영업주, 가족종사자, 고용자로 구성된다. 자영업주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자이며, 가족종사자는 자영업주의 가족으로 그 자영업주의 사업에 무급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고용자는 회사, 단체, 공공기관 등에 고용되어 일하는 자로 급여 및 임금을 받는 자와 회사, 단체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고용자 수 추이



자료 : 총무성, 「노동력조사」.

[그림 2] 휴업자 수 추이



자료 : 총무성, 「노동력조사」.

대비 366만 명이 감소했으며 이 역시 88개월 만의 감소세이다. 남성은 3,259만 명으로 3만 명이 감소했으나, 여성은 2,664만 명으로 34만 명이 감소했다. 특히 고용자 수와 관련해서는 여성과 비정규직의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 고용자 수를 보면, 정규직의 경우 3,563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3만 명이 증가해서 7개월 연속 증가세에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2,019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7만 명이 감소했다. 2개월 연속 감소세이다.

한편 휴업자의 경우 597만 명으로 자영업자가 70만 명, 고용자가 516만 명이다. 고용자 중 정규직의 경우 193만 명이 휴업했으나, 비정규직의 경우 300만 명이 휴업했다. 이 중 남성은 357만 명이 휴업했고, 여성은 240만 명이 휴업했다. 일본의 노동인구가 약 6,800만 명임을 고려했을 때, 전체 노동인구의 9%가 휴직상태에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다.

완전실업자는 189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 명이 증가하여 3개월 연속 증가세이며, 비노동력인구는 4,253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8만 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59개월 만에 증가세다. 주요 산업별로는 숙박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에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앞서도 서술했듯이 현재까지 나온 정부 공식통계는 4월 수치가 가장 최신 수치이며 긴급사태선언이 유지되었던 5월의 수치는 더욱 악화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도산

코로나19 관련 도산은 5월 15일 기준으로 152건으로, 3월까지 28건이던 것에 비해 다섯 배 이상 늘었다.<sup>8)</sup> 업종별로는 호텔·여관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19건), 의류·잡화소매(13건), 식품 제조(8건)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47개 도도부현 중에서 37개 도도부현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도산이 발생하였으며, 도쿄도(32건), 홋카이도(15건), 오사카(13건) 순으로 많다.

2020년 1~4월의 전체 도산 건수는 2,849건이고 앞으로도 도매 및 소매업을 중심으로 도

8) 朝日新聞(2020.5.15), 「倒産件数、コロナで7年ぶり1万件超えか 雇用にも影響」, <https://www.asahi.com/articles/ASN5H6Q55N5HULFA022.html>

산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광업과 관련된 연쇄 도산도 예상되고 있다. 지난 4월 한 달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입국 규제 여파로 일본을 찾은 외국인이 3천 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일 외국인이 월간 기준으로 1만 명선을 밑돈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4년 이후 처음이다.<sup>9)</sup> 이에 따라 방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산업이 활발한 간사이 지역(오사카, 효고, 교토)의 경제도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간사이 지역에서의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도산(부채액 1,000만 엔 이상)은 27건(22일 기준)에 이르며 호텔 체인과 공항의 기념품 납품업체 등 관광산업과 직접 연관된 업체의 도산이 두드러진다. 2020년 전국 도산 전망치는 7년 만에 1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휴폐업·해산 건수도 2019년(2만 3,634건)을 넘어선 2만 5천 건에 달해 도산 건수가 정점을 찍은 2008년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긴급 경제대책을 시행하였다.

## ■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 고용유지 및 사업지속 지원책을 중심으로

지난 4월 30일, 일본 국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117조 엔(한화 약 1,341조 원)의 추경 예산을 통과시켰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속화급부금, 10만 엔 정액급부금, 고용조정조성금, 휴교로 인한 유급휴가 취득 보조금, 각종 공과금 면제 등이 있다.

또한 5월 27일 일본 국무회의(閣議)에서 2차 추경예산 역시 같은 규모로 117조 엔을 추가로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총 234조 엔이 넘는 금액을 편성했으며, 세계 최대 규모 수준의 코로나19 지원 대책이라고 발표했다. 이 2차 추경예산안은 6월 6일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12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2차 추경예산안의 사업으로는 고용조정조성금의 추가확충, 중소기업의 임대료 지원, 대학생들에 대한 현금 지원, 한부모세대에

9) 연합뉴스(2020.5.20), 「올 4월 일본 찾은 외국인 달랑 '2천900명'...역대 최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11622747>

대한 지원 등이 있다. 다만, 글을 쓰는 현 시점에서 국회통과가 되지 않아 시행대책의 내용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 1차 추경에 따른 지원정책

1차 추경안(117조 엔)에 따라 조성된 주요한 지원정책은 <표 1>과 같다.

이 중 사업지속과 고용보조 정책으로 실시되고 있는 특별정액급부금, 지속화급부금, 세금 징수 유예, 고용조정조성금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추경안으로 편성된 지원금은 아니지만 기존의 예산을 전용하여 후생노동성이 실시하고 있는 ‘자녀 휴교로 인한 유급휴가 취득 보조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로, 고용조정조성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활동이 축소되었을 때 직원의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일본의 경우 사업장이 휴업상태에 들어갔을 때,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60% 정도이다. 긴급사태선언으로 인해 휴업에 들어간 사업장이 다수 존재하는데, 기업은 고용조정조성금을 수급하여 휴

<표 1> 1차 추경안의 주요 내용<sup>10)</sup>

지원정책명	지원정책 내용	예산 규모
특별정액급부금	모든 시민 10만 엔 지급	12조 8,803억 엔
지속화 급부금	수입이 감소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200만 엔, 개인사업주 100만 엔 지원	2조 3,176억 엔
세금 징수 유예(사업주 대상)	수입이 감소한 사업주의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1년 징수유예	26조 엔
고용조정조성금	휴업수당 보조	8,330억 엔
마스크의 확보	면 마스크 전국 약 5천만 세대 및 학교, 유아원, 간호시설 등에 배부	1,025억 엔
아비간의 확보	증산을 지원	139억 엔
관광, 소비지원	관광, 운송, 이벤트 사업에서의 소비를 촉진하는 할인 쿠폰 등을 발행	1조 6,794억 엔
지방지원	지방경제를 지원하는 임시교부금 창설	1조 엔

10) 朝日新聞(2020.4.8), 「經濟対策、効果は6兆円超の現金給付、柱 減収世帯30万円 / 中小企業200万円 / 個人事業者100万円」, <https://digital.asahi.com/articles/DA3S14433753.html>

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의 요청에 의한 휴업의 경우는 휴업수당의 전액에 해당하는 고용조정조성금을 받을 수 있으며,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액이 더 올라간다(단, 노동자 1인당 1일 수당 8,330엔이 상한임).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이 고용조정조성금을 통해 최대한 해고를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sup>11)</sup> 2차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1일 수당이 1만 5천 엔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일본 정부는 특별정액급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10만 엔(한화 약 113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4월 27일을 기준으로 등록된 모든 사람이며, 외국인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3개월 이상의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sup>12)</sup> 신청은 우편과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시기는 각 시청과 구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셋째로, 지속화 급부금이란 정부의 외출 자제 정책의 여파로 인해 수요 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및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 정책이다. 일본 정부는 지속화 급부금을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월 매출액이 전년동월대비 50% 이상 감소한 사업자에 대해 200만 엔(중소기업 사업자) 혹은 100만 엔(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사업자)을 지급하기로 했다.<sup>13)</sup> 2차 추경이 통과되면 의료법인, 농업법인, NGO 법인 등 회사 이외의 법인에 대해서도 이 지속화 급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넷째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2020년 2월 이후 1개월 이상 수입 혹은 매출액이 전년동월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개인이나 법인, 혹은 일시에 납세를 하기 곤란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각종 세금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법인세, 소득세, 국민연금 등이 대상이며,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이다. 단, 현재까지 신청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이후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자녀 휴교로 인한 유급휴가 취득 보조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코로나19 감염 확대 방지 정책으로 인해 자녀의 초등학교 등이 임시 휴업한 경우 또는 아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학교를 갈 수 없는 경우, 아이의 보호자인 노동자가 유급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

11) 후생노동성, 雇用調整助成金(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に伴う特例) 특설 페이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kyufukin/pageL07.html](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kyufukin/pageL07.html)

12) 총무성, 特別定額給付金 특설 페이지, <https://kyufukin.soumu.go.jp/ja-JP/>

13) 중소기업청, 持続化給付金 특설 페이지, <https://www.jizokuka-kyufu.jp/news/20200516.html>

는 보조금이다. 정규직·비정규직 고용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는 휴가수당에 대해 사업주는 이 보조금을 취득해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sup>14)</sup> 하루 상한은 8,330엔이며, 업무를 위탁받은 프리랜서의 경우 하루에 4,100엔까지 수급이 가능하다.

## 각 정책의 시행 상황

일본 정부가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코로나19의 지원으로 지급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첫째, 시행속도가 너무 늦다. 고용조정조성금의 경우 35만 건 넘는 상담이 있었는데, 5월 28일 시점으로 6만 153건이 신청되었고, 지급결정은 3만 381건에 그쳤다. 이러한 고용조정 조성금과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이 늦다고 할 수 있다. 4월 말~5월 초 시점에서 신청자는 프랑스 1,130만 명, 독일 1,010만 명, 이탈리아 830만 명이며, 이 제도를 신설한 영국의 경우에도 630만 명의 신청자를 기록하고 있어 6만 건에 그치고 있는 일본과는 현저히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sup>15)</sup>

지원속도가 너무 늦다는 의견이 많아 온라인 신청을 5월 20일부터 도입하였으나,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모두 공개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온라인 신청을 중지하였고, 현 시점(5월 29일)까지 재개와 관련하여 후생노동성은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sup>16)</sup>

‘특별정액급부금’과 관련해서도 그 시행속도가 늦다. 특별정액급부금의 경우 마이 넘버 카드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지자체의 우편신청서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일본의 마이 넘버 카드 보급률은 16%에 불과하고, 개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자동 전산처리가 되지 않아 신청내용을 다시 지자체 직원들이 수작업을 실시해 취합, 확인하고 있어 입금이 늦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총무성에 따르면 우편 신청의 경우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72%가 신

14) 후생노동성, 小学校休業等対応助成金 리플릿,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kyufukin/pageL07\\_00002.html](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kyufukin/pageL07_00002.html)

15)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연구소장 긴급칼럼(2020.5.28), 「新型コロナウイルス休業支援金 / 給付金の諸問題」, <https://www.jil.go.jp/tokusyuu/covid-19/column/011.html>

16) NHK(2020.5.22), 「雇用調整助成金オンライン申請トラブル 復旧見通し立たず」, <https://www3.nhk.or.jp/news/html/20200522/k10012440561000.html>

청 서류의 발송을 시작하였으나, 실제로 우편 신청에 따라 은행계좌로 송금을 시작한 지자체는 19%에 그쳤다.<sup>17)</sup> 현 시점까지 우편 발송을 시작하지 않은 지자체도 존재한다.

온라인 신청을 도입한 지속화 급부금의 경우 15일 기준 90만 건의 신청 중 13만 건을 처리해 가장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중소기업 사업주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수급대상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현재 일본 정부의 지원정책 시행에 있어서 두 번째 문제점은 ‘특별정액급부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조금이 사업주가 신청을 하고 수급 역시 사업주가 받고 있으며,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직접 가는 보조금의 종류가 적다는 것이다. ‘휴교로 인한 유급휴가 취득 보조금’의 경우 신청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며, 수급 역시 사업주가 받는다. 때문에 유급휴가를 줄지 말지, 그리고 어느 노동자에게 지급할지에 대한 판단도 사업주가 한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제보에 따르면 기업이 일손부족으로 노동자를 쉬게 하고 싶지 않은 경우나,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귀찮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sup>18)</sup>

따라서 이는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그 지원이 또 한번 늦어질 수 있다. 현재 이런 느린 행정절차로 인해 일본의 행정력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보조금을 수급받은 사람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활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다.

## 2차 추경에 따른 지원방안

위에서도 서술했듯이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사업으로 제시한 사업은 ‘저소득층의 한부모세대 지원’, ‘실질무이자, 무담보사업자금’, ‘임대료확보급부금’, ‘휴업수당 직접 지급’, ‘대학생 지원정책’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큰 예산은 ‘실질무이자, 무담보사업자금’으로 약 11조 엔이 책정되어 있다.

17) Bloomberg, 「紙中心の日本とIT化進む韓国、コロナ給付金で支給スピードに差」, <https://www.bloomberg.co.jp/news/articles/2020-05-21/QANJKBT0AFB401>

18) 中日新聞(2020.5.11), 「休校助成「会社が使ってくれない」働く保護者、相談窓口に訴え」, <https://www.chunichi.co.jp/article/front/list/CK2020051102000070.html>

아직 정확한 시행안과 시행방법이 통과된 상황이 아니라 개요 정도를 서술하고자 한다. ‘실질무이자, 무담보사업자금’의 경우 일본정책금융공고라는 정부투자은행이 0.9%의 이자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곤란해진 사업주를 대상으로 대출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이자 역시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해결한다는 정책이다.

‘임대료확보급부금’의 경우 대상이 되는 것은 수입이 작년에 비해, 한 달간 50% 이상 감소한 사업자나, 3개월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은 1개월에 50만 엔, 개인 사업주는 1개월에 25만 엔을 상한으로, 임대료의 2/3을 6개월간 급부하는 정책이다.

‘휴업수당 직접지급’ 정책의 경우, 기업의 사정악화로 인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휴업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휴업 이전 임금의 80%를 직접 지급하며 상한액은 고용조정보조금의 수준을 합쳐 매월 33만 엔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지원정책’의 경우, 가계가 어려워진 학생들에 한해 10만 엔 혹은 20만 엔의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정책이다. 단, 일부의 학생에 한하며, 아직 선발기준 등 세부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대학, 대학원, 전문학교, 일본어학교 등에 다니는 43만 명을 대상으로 정했다. 상기의 정책은 국회 통과 이후 좀 더 세부적인 시행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 맺음말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각 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에 대처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경제도 밝다고 전망하기 어렵다. 닛케이 신문은 전 세계 8,400여 개의 기업의 1~3월 실적 발표치 혹은 예상치를 분석한 결과, 일본의 주요 기업들의 순이익이 78%의 감소폭을 보였고 분석 지역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sup>19)</sup> 뿐만 아니라, 2분기 성장에 관련해서도 일본 경제가 1945년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최악의 역성장

19) 日本經濟新聞(2020.5.2), 「世界の企業、1~3月4割減益 日欧は7~8割減」,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8763990S0A500C2MM8000/>

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다.<sup>20)</sup>

이런 상황에서 지원금이 필요한 곳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다. 많은 전문가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재건하는 것보다 하루 빨리 지원금 등이 어려운 곳에 도달하게 해 지금 당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제주체들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명확한 계획도 필요하다. 코로나19의 감염자가 또 다시 속출하면 이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추경안을 통해 경제주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 하더라도 경제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앞으로 코로나19의 전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문제로 떠오른 일본의 아날로그 행정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극복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중요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KLI**

20) 産経新聞(2020.5.4), 「4~6月GDP、戦後最悪の21%減 エコノミスト28人予測」, <https://www.sankei.com/economy/news/200504/ecn2005040003-n1.html>